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 연월일 | 2024. . . (제 회)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4.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1. 개정이유

가사에 대한 걱정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간호가 필요한 경우 외에도 돌봄·봉양이 필요한 경우까지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사휴직제도 개선(안 제48조제3항제5호)

현재 사고·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사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안 제60조의3제1항)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다. 환수·부과처분 미이행시 징수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등)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등을 기한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21. ~ 5. 31.) 예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9조제3항제4호 중 “이내”를 “이내.”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제5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게 징수를 위탁한다.

제6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 및 징계부
가금 부과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流用)인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제62조제2항 본문 중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기간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직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4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휴직기간을 계산한다.

제3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 ⑧ (생략)

제49조(휴직기간) ①·② (생략)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3. (생략)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단서 신설>

④ (생략)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9조(휴직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이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
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게 징수를 위탁한다.

⑥ (생략)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流用)인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 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② ----- 징계의 결등-----

----- 징계의결등-----
-----.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본인-----

----- 명할 수 있고, 본인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생 략)

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
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
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
다.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
| 연 락 처 | (02) 748 - 5121 |